



505보안부대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위한 긴급 토론회

일 시 **2019**
3월 20일 | 수 | **오후 3시**

장 소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

발 제
및
토 론

최정기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505보안부대 옛터의 역사적 의미와 기념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이건근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

민주화운동 사적지의 복원회귀성에 부합한 505보안부대 옛 터의 활용

김용희 (광주일보)

해외 사례를 통해 본 505보안부대의 보존과 활용 방안

사 회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주 관



순서

1. 505보안부대 역사배움 공간 조성 경과 (광주광역시)..... 1
2. 505보안대 옛터의 역사적 의미와 기념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최정기_전남대학교 5·18연구소)..... 3
3. 민주화운동 사적지의 복원회귀성에 부합한 505 보안부대
옛 터의 활용 (이건근_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 7
4. 해외 사례를 통해 본 505보안부대의
보존과 활용 방안 (김용희_광주일보)..... 23

1

505보안부대 역사배움 공간 조성 경과(광주광역시)

□ 사업개요

- 기간/위치 : '19 ~ '23년 / 505보안부대(쌍촌동 993-1)
- 총사업비 : 101억원(국비 53억, 시비 48억)
- 주관/시행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 사업내용 : 5·18사적지 원형보존 및 역사체험 배움공간 조성

□ 추진상황 및 계획

- 505보안부대 무상양여 및 교환(부지확보) : '14.10. 7.
-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수립 용역 : '15. 5. ~'16. 3.
- 5·18역사공원 조성계획수립 용역 : '16. 3. ~'17. 8.
- 505보안부대 활용 TF 구성 및 운영 : '18. 9. 3.
-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19. 1. ~ 6.

□ 향후계획

- 건물 안전진단 용역 : '19. 3. ~ 8.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9. 9. ~'20. 12.
- 공사시행 : '19. 8. ~'23. 12.
 - 공원조성공사 시행('19. 8. ~)

505보안대 옛터의 역사적 의미와 기념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최정기(전남대학교 5·18연구소)

I. 쟁점의 정리

- 505보안대 옛터가 갖는 역사적 의미
- 5·18민중항쟁의 유형적 기념시설과 505보안대 옛터의 위상
- 기념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505보안대 옛터의 의미 문제

II. 505보안대 옛터가 갖는 역사적 의미

- 505보안대가 한국의 권위주의체제를 지탱하는 각종 불법적인 대민활동을 해왔던 기관이었다는 사실은,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군 정보기구가 그간 해왔던 활동에 비추어서 대체로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505보안대 옛터가 광주지역의 민주화운동이나, 70-90년대 한국사회의 인권 문제, 특히 5·18국가폭력이나 민중항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장소라는 사실은 이론이 없음
- 1980년 당시 505보안대는 광주지역에서 일어난 예비검속과 국가폭력의 실질적인 지휘기관이며, 동시에 다른 수사기관을 지휘하면서 민중항쟁에 대한 진압과 사후 수습과정을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실행한 기관이었음
- 1980년 5월 17일 예비 검속된 광주·전남지역의 민주인사들은 거의 대부분 505보안대로 끌려가 살인적이고 무자비한 고문을 받았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함
- 이상의 사실들로 판단할 때 505보안대 옛터는 5·18국가폭력과 민중항쟁,

한 사건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자원임을 알 수 있음

Ⅲ. 5·18민중항쟁의 유형적 기념시설과 505보안대 옛터의 위상

- 5·18민중항쟁에 대한 기념사업을 최초로 기획하였던 『5·18종합계획』에서는 505보안대의 터와 건물이 당시 군부대 시설이라는 이유로 기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상무대의 이전과 관련하여 2005년 11월 30일 505보안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음. 하지만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이전 사실을 잘 알지 못했고, 보안대 옛터와 건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그러다가 2007년 5월부터 광주환경운동연합이나 5·18기념재단 등 관련기관들의 문제제기로 이 터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으며, 광주광역시와 민간단체, 학술연구기관 등의 다양한 노력을 거쳐서 2014년 2월 광주광역시와 국방부 간에 1/2은 무상양여, 1/2은 다른 땅과 교환하기로 합의되었음
- 505보안대 옛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광주광역시의 도시계획과 5·18민중항쟁 기념사업과의 연계 속에서 사업의 방향이 결정되어야 함
- 특히 바로 인근에 위치한 국군광주병원 옛터와 상무지구에 있는 각종 기념시설들과의 관계 속에서 5·18민중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광주광역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광주광역시의 도시발전 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Ⅳ. 기념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505보안대 옛터의 의미 문제

- 505보안대 옛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2007년 이후 수많은 주장과 논의가 있어 왔으며, 그만큼 수많은 방안이 제기된 바 있음
- 그간의 논의를 살펴보면 크게 ‘역사공원’ 혹은 ‘역사교육 공간’으로 하자는

주장(5·18기념재단·광주환경운동연합 등, 2007)과
 ‘공원+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하자는 주장(광주시의회 주최 토론회,
 광주환경운동연합·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주관, 2014),
 ‘꿈의 공원 + 5·18체험 교육공간’으로 하자는 주장(2016,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하 용역), 전남대 5·18연구소) 등이 있음

- 특히 2016년도의 용역보고서는 광주광역시의 도시계획과 5·18기념사업이라는 틀 속에서 505보안대 옛터의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유관단체의 자문을 받아 사료적 가치가 있는 시설 및 공간의 보존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용역보고서는 연구과정에서 시민공청회 1회, 서구 주민간담회 1회, 유관기관 자문회의 5회, 현장답사 2회, 전문가 설문조사 1회를 실시하였음. 물론 이러한 형식적 절차가 그 내용의 정당함까지 증명하는지는 의문임
- 용역보고서는 위에서 언급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505보안대 옛터를 도시의 미래를 위한 교육공간으로 설정하고 있음. 즉 5·18민중항쟁과 관련된 시설들을 원형대로 보존하면서, 해당 장소를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5·18역사체험을 통해 올바른 시민으로 나아가는 교육의 장으로 설정하고 있음
- 용역보고서의 주장은 기존의 5·18관련 기념시설들 중 미래세대를 위한 시설이나 공간이 없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제안으로 평가함

V. 맺음말

- 505보안대 옛터는 광주지역의 민주화운동이나 인권의 현장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5·18민중항쟁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5·18민중항쟁과 관련된 주요 기관이나 시설들은 몇 가지 원칙 하에서 기념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그것은 첫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시설을 보존하고, 역사적 의미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둘째, 기념시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광주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기념시설이 그 의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주체 및 재원을 함께 고려하면서 설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임

- 이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이와 같은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러한 참여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정의 등으로 나타나는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기념사업에서는 더욱 그러한 점이 강조되어야 함
- 이렇게 볼 때 용역보고서는, 좀 더 구체화하고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5보안대 옛터와 관련한 기념사업의 방향에 대해 미래세대의 교육과 체험이라는 주목할 만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함
- 다만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숙의민주주의 형태의 합의 도출과정을 통해 합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 한 가지 용역보고서의 내용에 동의하더라도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의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함.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다음 세대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상당한 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민주화운동 사적지의 복원회귀성에 부합한 505 보안부대 옛 터의 활용

이건근(조선대 민주평화연구원)

I. 연구배경

- 광주광역시는 505보안부대 옛 터(이하 보안부대 터)를 5·18역사공원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5·18민주화운동(이하 5·18) 정신의 기념과 시민쉼터 공간 마련을 동시에 기하고자함. 즉, 5·18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보안부대 터를 역사체험·교육장과 유·청소년 창의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함(5·18선양과).
- 보안부대 터가 5·18사적지(조례 제26호)인 점에서 원형보존의 대상이지만, 도시환경 개선과 유·청소년 교육의 최적지로도 여겨진 까닭에 양대 가치를 조화하는 방안이 2007년부터 논의되어 오던 중 올해 2019년에 공원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이름.

II. 연구목적

- 보안부대 터를 5·18 당시 원형으로 보존해야 하며, 이후 신축된 건물들을 중심으로 유·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 장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주된 근거를 민주화운동 사적지의 원형복원회귀성에 둔다.

III. 보안부대 터

- 보안부대는 보안사령부의 광주지역 집단으로서 5·18 당시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주도하고, 5·18진압의 명분을 북한남침과 김대중 내란음모로 조작하기 위해 수감자의 인권을 잔인한 방법으로 침해하였음.
- 광주광역시는 보안부대 터를 2008년 3월에 5·18역사공원으로 지정하였고, 2012년 10월에 국방부로부터 무상양여(일부교환조건)받았고, 2015년부터 5·18기념사업기본계획과 역사공원조정계획을 추진하여 2019년부터 5년 동안 10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임.

- 국군통합병원 옛 터를 트라우마 센터 등으로 활용한다는 의견과 비교해서 보안부대 터에 대한 활용방안은 원형보존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수준이외에 더 구체적인 합의를 내놓지 않음.

IV. 지난 토론회의 주요 의견과 논자의 견해

○ 2007년 5월, 광주환경운동연합 주최 정책토론회

- 의견1: 1. 보안부대 터는 새로운 도시 명소로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킴, 2. 군사시설과 공공시설 이전장소의 활용을 사례로 언급함, 3. 보안부대 터는 양호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4. 타 5·18사적지와 통합하여 역사공원을 조성해야 함.
- 의견2: 1. 보안부대 터는 진압군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사건조작과 고문을 한 장소임, 2. 시민들의 경험을 생산한 장소로서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역사체험과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을 추가해야 함.

○ 2007년 10월, 5·18기념재단주최 간담회

- 의견1: 1. 항쟁현장의 역사성을 훼손해서는 안 됨, 2. 주요 사례로서 서울 남산의 안전기획부 터가 국제 유스호스텔로 변형되었음을 지적함, 3. 보안부대 터의 특성을 접근성, 잠재된 개발수요, 역사성으로 설명함, 4. 당 장소를 5·18현장을 집대성한 공간으로 파악하되, 평화의 공간이자 시민의 일상적 생활공간으로도 활용해야 함.
- 의견2: 1. 보안부대 터의 녹지경관이 공원화에 적합함, 2. 역사적 상징성이 보존과 활용 모두에 기여함, 3. 역사공원의 공공성은 시민과 행정의 파트너십을 요구함, 4. 생동감 있는 자연과 문화적 이용 그리고 공원 녹지 확보를 강조함.

○ 2018년 10월, 5·18기념재단주최 제1차 간담회

- 발표자와 토론자는 1980년 당시 505보안부대의 조직과 활동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소개하였고, 증언자들은 갖은 고문과 가혹 행위를 설명하였음.

○ 2018년 10월, 5·18기념재단주최 제2차 간담회

- 의견1: 1. 미해결된 과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치유공간으로 삼고 미래세대와 기억을 공유하기 위해서 원형대로 보존해야 함, 2. 시민생활공원, 문화예술공간+시민생활공원, 유·청소년 꿈의 공원과 5·18역사체험교육

장의 3가지 안을 소개함.

- 의견2: 만행의 역사를 기억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것의 교훈을 체험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으로 국군통합병원 옛 터와 연결된 순례자의 길을 조성할 것을 제시함.
- 의견3: 사진과 전시물을 제시함.
- 시민1: 내무반 별관을 청소년 학습장, 관사를 게스트 하우스, 건물 밖 공간을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시함.
- 시민2: 전시와 교육보다 참여하는 공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함.
- 시민3: 장소에 담긴 정신적 가치가 더 중요하므로 개축을 주장함.

○ 논자의 견해

- 위 의견들은 보안부대 터를 원형대로 보존해야 함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역사성을 강조한 원형보존과 유·청소년 등 시민의 일반문화공간으로 승화시키자는 응용개발의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남.
 - 일부 의견에서 사례로 삼은 군사시설과 공공시설 이전장소로서 서울 보라매 공원(구 공군 사관학교), 남산골 한옥마을(구 수도방위사령부), 금남근린공원(구 한국은행), 상록근린공원(구 도지사공관)은 민주화운동 사적지인 보안부대 터와 비교하기 어려움.
 - 역사적 체험과 교육, 평화의 공간, 시민의 일상적 생활공간, 문화적 이용 등의 용어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시민생활 공원, 문화예술 공간, 유·청소년 꿈의 공원, 5·18역사체험교육장 등은 기념과 활용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 현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성폭력·암매장 사건 등의 조사가 이뤄져 가려진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음.
 - 보안부대는 1980년 당시 무고한 시민들과 민주인사들을 잔인하게 고문했던 현장이며, 5·18민주화운동 이후에도 왜곡·조작에 가담했던 핵심 기관이었음과 1980년 5·18 전후 505보안부대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5·18의 왜곡되고, 은폐되었던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임.
- 논자는 보안부대 터를 최대한 원형보존하고, 그 이외에 신축된 장소들을 민주시민교육의 장소로 활용하여 유·청소년에게 올바른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시민에게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실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V. 보안부대 터 활용관련 기본계획 문헌 비교

○ 2010년, 최병옥, 「5·18역사공원 기본계획」(석사학위논문)

- 1. 역사적 원형이 보존된 공원 환경 조성, 2. 역사적 사건의 사실적 재현과 교육적 전달 공간 조성, 3. 지역주민의 사회적 소통 공간 제공, 4. 5·18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작업과 이에 따른 후속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 인용한 사례: 서대문 독립공원, UN기념공원, 독립기념관, The FDR Memorial, Proposal for Holocaust Memorial

○ 2016년, 광주광역시청,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용역)

- 1. 민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인권공원, 2. 이용자 중심의 시민공원, 3. 환경 친화적 생활공원, 4. 지속가능한 도시공원을 역사공원의 기본방향으로 함.
- 인용한 사례: 부산시민공원(구 하야리아 미군부대), 인천 월미공원(구 군부대 주둔지), 서울 금천아트캠프(공병 도하부대), 미국 샌프란시스코 프레시디오(구 미군 제6육군기지), 독일 바우반 지구(프라이부르크 시 프랑스군 군사기지), 일본의 오키나와 현(미군 이전부지)

○ 논자의 견해:

- 최병옥의 활용계획안은 사적지보존형과 근린공원형으로 구분한 반면 광주광역시청의 경우는 5·18기억공동체의 확대와 5·18의 미래 지속성의 강화의 측면에서 미래 세대인 유·청소년과 공감하는 공간을 강조함으로써 양 형태의 절충안을 모색함(그림 1-4 참조).
- 두 가지 활용계획이 인용한 사례들은 서대문 독립공원의 서대문형무소와 베를린의 Holocaust Memorial를 제외하고 5·18에서 발생한 국가폭력과 인권 침해의 경우와 무관함. 그 대신 남영동 대공분실, 제주 4·3평화기념공원,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수용소,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난징대학살 기념관, 캄보디아 투얼 슬렝 등이 더 적합한 사례임.
- 5·18은 민주화운동의 세계적 인지도를 가진 광주광역시의 문화적 자산이라는 점에서 보안부대 터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탐방객들에게 선보일 역사적 재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위적 개발보다 당시 현장을 원형복원하는 것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임.

<그림 1>

사적지 보존형: 출처, 최병옥, 2010: 57



<그림 2>

근린공원형; 출처, 최병옥, 2010: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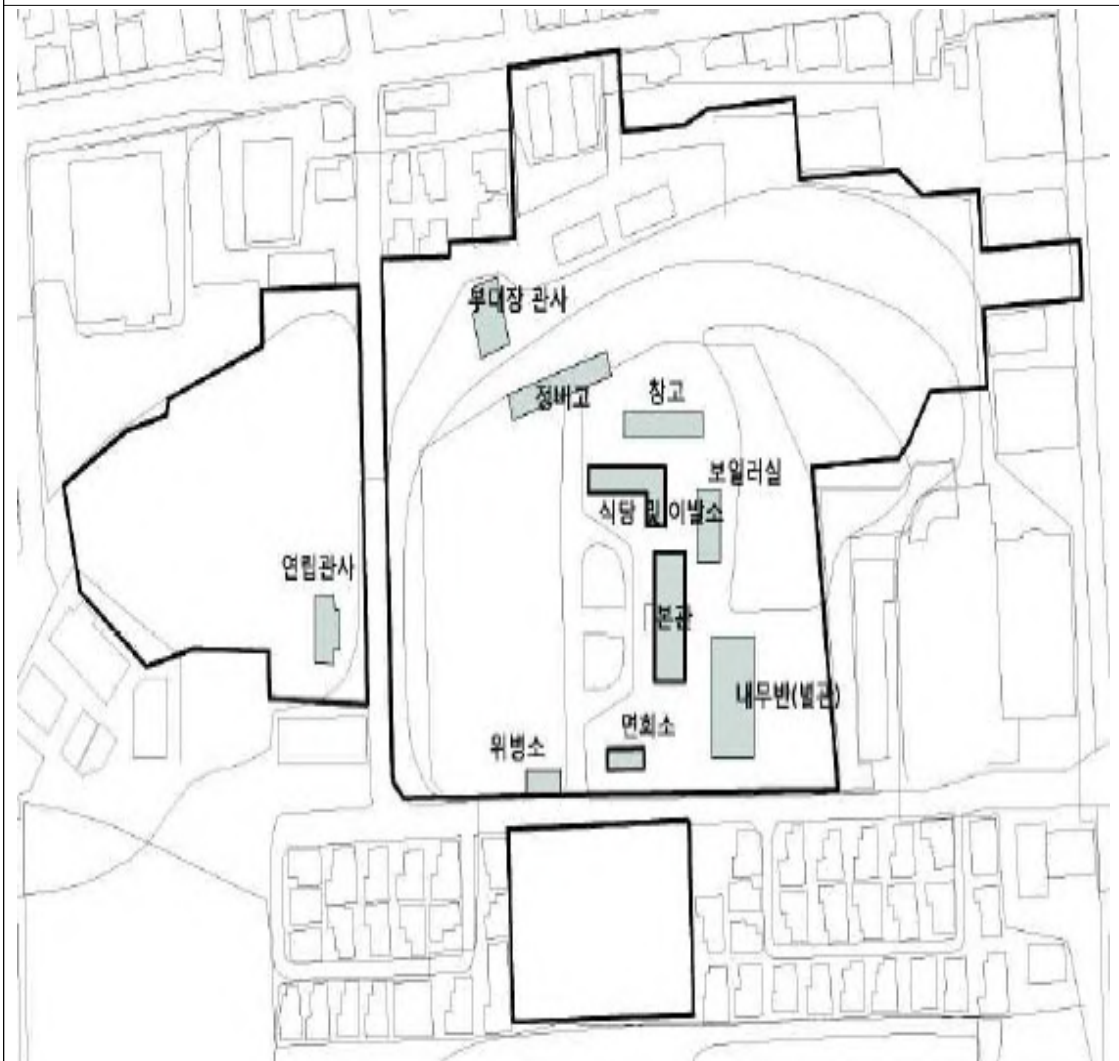


<그림 3>

505보안부대 옛터의 기존 건축물 주요건물 현황, 출처, 광주광역시청, 2016: 225

명칭	면적(㎡)	준공연도	명칭	면적(㎡)	준공연도
연립관사	357.84	91.12.19	화장실	3	75.05.01
위병소	36.80	81.01.15	목욕탕	45.4	81.01.15
본관	763.70	75.04.23	보일러실	48	81.01.15
면회실	65.40	75.08.01	부대장 관사	153.4	90.11.30
부대원 관사	115.92	89.11.30	차량정비고	216	90.11.30
식당 및 이발소	219.77	75.04.23	내무반 별관	849.62	90.11.30
창고	168	75.05.01			

505보안부대 옛터의 기존 건축물 배치 현황, 출처, 상동



<그림 4>

505 보안부대 옛터 배치계획안, 출처, 광주광역시청, 2010: 239



5·18의 기억이 미래 세대에 전승되어 5·18의 공동체적 가치가 현대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원형보존된 창의센터에서 5·18 역사체험교육을 시행함



VI. 원형보존의 정의

- 원형이란 “건축물의 규모와 양식 등 건물 구조체가 초기의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원형보존은 “건물의 [유지보수가 시행되었을지라도], 증축이나 부분철거 없이 건립당시의 양식과 규모를 유지하는 경우”이며, 원형복원은 “변경된 원형을 대규모의 수리를 통하여 복원하는 경우”임(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사례 연구』, 2007: 56).
- 원형보존은 훼손의 정도와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원형을 유지하려는 의도에 있어서 원형복원과 다르지 않다.
- 이외에 건물의 일부분만 보존하는 부분보존, 건물의 이용목적에 맞게 (대)수선하는 개수보존, 위치를 이전시키는 이축보존, 소실된 건물을 재건축하는 신축보존, 역사적 장소와 유적지를 보존하고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현장보존이 있음.

<그림 5> 원형보존의 사례

		
서울대학교병원(1908)	구 보성여관(1940)	한밭교육박물관(1938)
		
명동예술극장(1934)	감리교 신학대학교 역사박물관(1907)	인천문화원(1901년)
		
오웬기념각(1914)	감곡성당 사제관(1896)	부산 근대역사관(1929)

<그림 6> 원형복원의 사례

		
진해우체국(1910)	정독도서관(1938)	이화여자대학교 파이프홀(1935)
		
전동성당 사제관(1926)	최순우 옛집 (1929)	화진포의 성 (1938)
		
명치관(1911)	가자미도리관(1909)	모예기관(1903)

VII. 민주화운동 사적지의 복원회귀성과 5·18관련 시평

- 국내 민주화운동 사적지는 각 지역의 정서를 대변하는 동시에 민주·인권·평화개념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역성과 보편성의 양가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표 1> 한국 민주화운동과 기념시설

사건	년도(장소)	시설
2·28대구민주운동화운동	1960.02.28.(대구)	2.28기념중앙공원
3·5대전민주의거	1960.03.05.(대전)	3·5대전민주의거공원(예정)
3·15의거	1960.03.15.(마산)	국립3·15민주묘지
4·19혁명	1960.04.19.(전국)	국립4·19민주묘지(서울, 수유동)
부마항쟁	1979.10.16.,18(부산,마산)	부산민주공원
5·18민주화운동	1980.05.18.(광주)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 등)
6·10민주항쟁	1987.06.10.(전국)	민주인권기념관(남영동 대공분실)

○ 민주화운동 관련 건축과 조형물은 평화의 소녀상을 두고 한·일 간 외교문제가 발생함에서 보듯이 공간적 파급효과가 지대함.

○ **복원회귀성이란**

- 민주화운동 사적지가 지역성과 보편성의 양가적 가치와 지대한 공간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슬프거나 영웅적인 사연이 발생한 후, 2. 가해자 또는 방관자가 그 흔적을 훼손한 경우, 3. 그 장소를 원형대로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사연과 훼손의 정도에 비례하여 자연스럽게 생성됨을 의미함.
- 그 대표적인 증거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옛 전남도청의 원형복원 운동사례이고, 서대문형무소, 남영동 대공분실, 아우슈비츠 수용소 등도 이에 해당함.
- 민주화운동 사적지의 복원회귀성이 인위적 또는 우연적 요소에 의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잠재적인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뿐, 진정한 의미의 상생과 화해가 불가능하게 됨.

○ **복원회귀성을 적용한 시평(時評)**

- 39년 전 5·18은 광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성과 6·10항쟁으로 발전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음.
- 1988년 국회청문회에서 보듯이 가해자 측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은폐·왜곡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두고 국론이 분열되는 현상이 발생함.
- 영화 <화려한 휴가>(2007)와 <택시 운전사>(2017)의 흥행은 5·18의 복원회귀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마침내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 2018년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인권침해, 발포명령, 역사왜곡 등의 진실이 원형적 타임라인으로 밝혀질 것임.
- 하지만, 지난 세월호사건 진상조사에서 보듯이 5·18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반드시 요구됨.
- 이러한 점에서 지역과 전국에 “민주시민교육”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함.

VIII. 보안부대 터의 복원회귀성에 부합한 주된 활용방안으로서 원형보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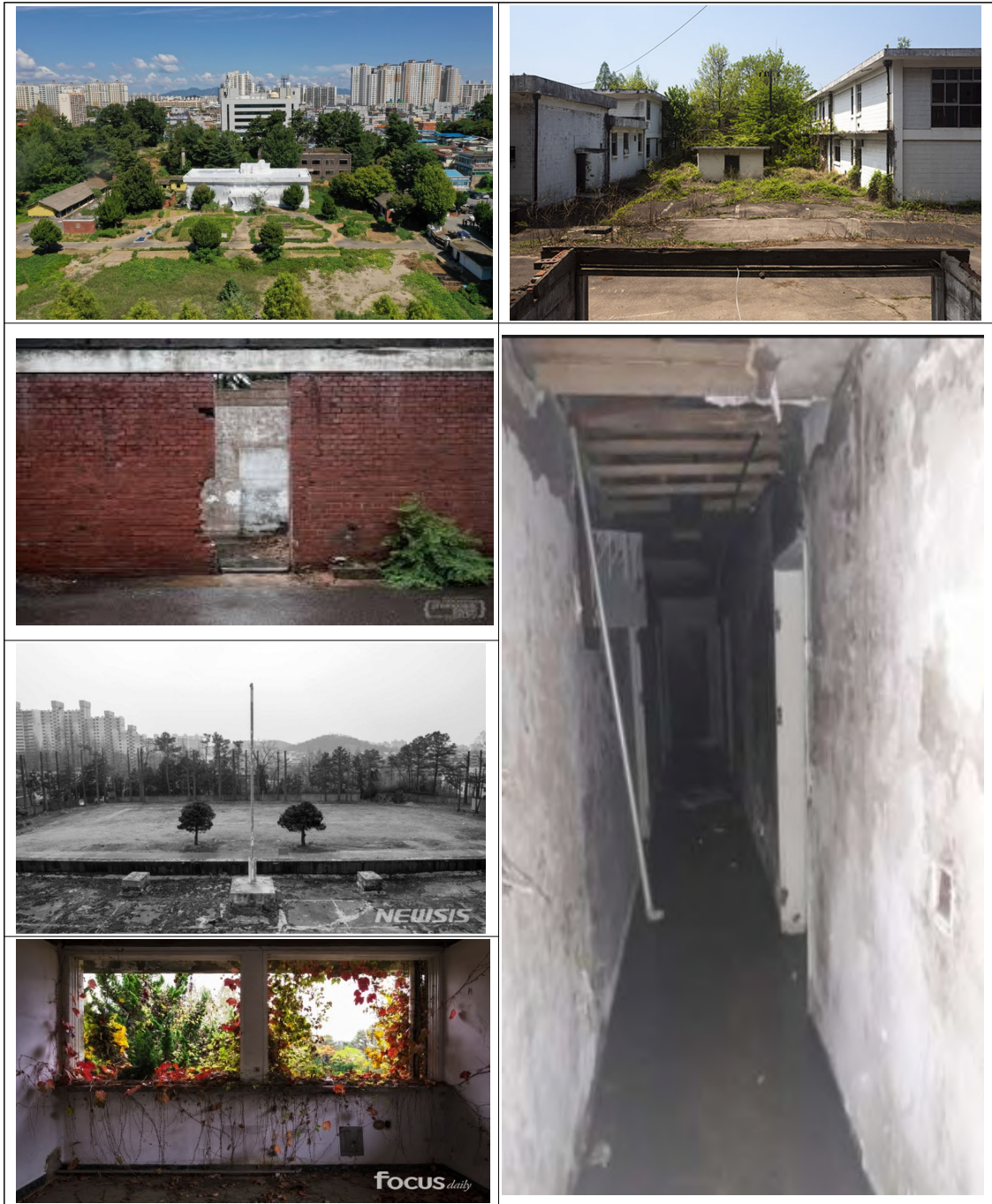
○ 광주광역시청의 실용주의적 시책

- 광주광역시는 “5·18사적지 제26호인 505보안부대 옛터를 원형보존하는 한편 역사체험을 통한 미래세대 교육공간으로 조성함”을 목표로 “세대 간 통합을 지향하는 역사체험·교육 및 청소년 창의 공간 조성”과 “상상력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설치물을 자유롭게 탐험하고 체험하는 어린이 꿈의 공원 조성”에 힘쓰고 있음.

○ 보안부대 터의 복원회귀성과 시책의 조화

- 보안부대 터의 복원회귀성에 부합하는 역사체험은 “국가폭력에 대한 경계”에, 역사교육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의식으로서 저항권”의 학습에 기초해야 함.
- 5·18역사의 기념과 정신계승은 더 이상 이와 같이 불행스런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됨과 동시에 소중한 5·18희생정신을 계속 이어가야 함을 의미함.
- “보안부대 터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표어가 가진 참 뜻은 단순히 건물의 이용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말함이 아니라, 39년 동안 규명하지 못했던 보안부대 터에 담긴 역사적 진실을 시민들이 공유하게 됨임.

<그림 7> 보안부대 터



○ 원형보존과 응용개발의 갈등에 대한 오해

- 보안부대 터의 활용에 있어서 소위 유적을 원형대로 보존하자는 측과 새롭게 개발하자는 측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말함은 이분법에 따른 인위적 해석에 불과함.
- 새로운 응용개발 방법이 원형을 훼손하는 것이냐 아니면 발전시키는 것이냐

의 정도의 차이이고,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존사례에서 흔히 발생하는 측면이 강함.

- 원형보존은 응용개발에 반대한 장애요소가 아니며, 지역의 미래세대에게 애향심과 지역공동체 정신을 전해주는 활용의 한 방법임.
- 예를 들어, 현재 서대문형무소의 원형복원사업은 애초 서대문 독립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위치한 역사관의 원형이 심하게 훼손되었음을 자각한 결과 시도되었고, 현재 서울시민의 지지를 얻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음.

IX. 보안부대 터의 원형보존을 보강하는 활용방안으로서 민주시민교육(중앙선거위원회, <외국의 민주시민교육>, 2016 참조)

○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사례

-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나치의 만행에 수수방관했던 전력을 반성하고, 1951년 연방정치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체주의 또는 독재에 저항할 수 있는 민주·인권교육을 시행함.
-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정치교육을 유·청소년의 학교정규과목에 포함시키고, 1976년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맺고, 1. 주입식 교육 금지, 2. 논쟁의 투명성, 3. 학습자 지향적인 교육을 보장함.

○ 다른 나라의 민주시민교육 사례

- 호주는 대화와 타협의 참여민주주의로 투표율 95퍼센트를 달성하였음.
- 영국은 국민의 무관심과 불신을 타파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과목을 11세에서 16세까지의 학생이 배워야 할 법정과목으로 채택함.
- 스웨덴은 매년 7월 정당들의 정책토론회를 축제의 분위기에서 개최하는 등 청소년과 성인 대다수가 시민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미국은 다인종 이민국가로서 시민교육센터에서 마련한 “국가표준지침서”에 따라 생활 속 시민교육을 시행함.

○ 5·18 이후 신축된 건물들을 이용한 민주시민교육

- 5·18 당시 보안부대 터에 있던 본관, 면회실, 식당 및 이발소, 창고, 화장실을 원형대로 보존하는 대신에, 나머지 건물들은 미래세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장소로 활용해야 함.

- 구체적인 프로그램 예시로서 1. 민주인권평화 이념에 기억해야 할 인물들에 대한 학습, 2. 역할극과 정치 시뮬레이션, 3. 실제 현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현장체험학습), 4. 민주·인권·평화 이념과 관련된 영화 등 예술작품을 이용한 인문학적 학습, 5. 보안부대 내에서의 현장체험 학습, 6. 자원봉사 활동하는 학습, 7. 멘토링 및 동아리를 이용한 체험·실천 학습이 있음.

X. 결론

- 군사정권 하의 삶은 그 자체가 민주화운동이었지만, 오늘날 미래세대는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에 어려움.
- 보안부대 터는 5·18 진상규명이 가장 덜 된 장소로서 무고한 시민들과 민주인사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그 죄상을 북한소행 또는 내란죄로 조작했던 장소라는 점에서 원형대로 보존/복원되어야 함.
- 강력한 복원회귀성을 가진 보안부대 터를 물리적·기능적으로 보존함으로써 희생자들의 아픔과 선행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유명한 다크 투어리즘 명소로 삼아야 함.
- 민주시민교육을 체계화하여 유·청소년이 감각적으로 그 고통을 체험하면서, 사회 현안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민주·인권·평화개념의 화합물로서 공동체의식을 표방함으로써,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민주의식을 가르쳐야 함.

해외 사례를 통해 본 505보안부대의 보존과 활용 방안 베를린 ‘공포의 지형’(Topographie des Terrors) 기념관 외

김용희(광주일보)



독일 베를린 ‘공포의 지형 기념관’ 기념관은 게슈타포(나치 비밀경찰) 본부 잔해와 그 위로 세워진 베를린 장벽을 활용한 야외 전시공간으로, 나치범죄 가해자들의 행적을 조명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 중심부에 있는 ‘공포의 지형’(Topographie des Terrors) 기념관’은 나치 정권(1933~1945) 때 비밀경찰이었던 게슈타포(Gestapo) 사령부와 히틀러 친위대였던 SS(Schutzstaffel)의 본부로 사용됐던 건물 잔해에 자리하고 있다. 사령부 건물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크게 파괴 됐다가 전쟁 이후 철거됐다. 기념관이 지어지면서 땅 속에 남아있던 건물의 지하공간과 기둥 일부분을 굴착해 공개하고 있다.



2차대전 때 폭격으로 무너진 게슈타포 건물 기둥

게슈타포 건물 잔해 위에는 베를린 장벽이 남아있다. 2차 세계대전부터 냉전 종식 후 상징적인 건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독일 베를린시는 게슈타포와 당시 독일군, 나치 협력자의 행적을 글과 사진으로 설명하고

나치 독일의 만행을 고발하기 위해 이 기념관을 만들었다. 피해자 입장에서 나치의 만행을 알리는 박물관이나 기념관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 관련 국가에 많이 있지만 이 기념관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다. 이곳은 가해자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한 점이 눈길을 끈다. 나치당 출범 초기부터 2차 세계대전 때 자행했던 만행, 유대인 검거와 학살에 앞장섰던 경찰, 군인, 부역자 등 독일의 치부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기념관은 ‘독일의 심장’으로 불리는 브란덴부르크문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기념관 주변에는 예전 게슈타포 사령부 건물이 있었던 자리였음을 알리는 표지판이 곳곳에 세워져 역사적 장소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베를린 장벽과 한공간에 있는 특이한 형태와 역사적 의미 덕분에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베를린 장벽을 따라 1500m 규모로 조성된 기념관

기념관은 1987년 베를린 탄생 750 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입구나 울타리가 없는 일종의 개방형 야외 전시장 형태로 지어졌다.

1992년부터는 ‘공포의 지형’이라는 재단이 세워져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바로 옆에 문서보관소가 새롭게 들어서 누구에게나 개방된 도서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외부 전시장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까닭에 기념관이 있는 베를린 장벽에는 세계 각국 관람객들이 다양한 언어로 적어놓은 낙서를 볼 수 있다. 자기 이름을 적은 단순한 낙서도 있었지만 ‘MADNESS’(광기), ‘HELL’(지옥), ‘necessary?’(꼭 필요했었나?) 등 의미심장한 문구도 있었다. 풍화돼 조금씩 부서지고 있는 장벽과 낙서, 게슈타포 잔해는 서로 어우러져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1933 베를린-독재의 길(The path to dictatorship)’이라는 상설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전시장 한가운데에는 과거 이곳으로 잡혀온 나치 반대파들이 손을 들고 있었고 나치 군인이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찍은 대형 사진이 설치돼 있다. 또 신문기사, 사진 등을 통해 희생자들을 조명하고 공간에 대한 의미를 전달했다.



베를린 장벽에서 바라본 문서보관소. 도서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료 입장이다.

문서보관소 로비에서는 상설전시 ‘공포의 지형:역사적인 장소(Der Historische Ort)’가 열리고 있다. ‘나치 출범’, ‘공포의 기관(SS와 경찰)’, ‘제국의 공포, 박해 및 종말’, ‘독일 제국이 점령한 영토’, ‘전쟁 종식과 전후’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사진, 재판 자료, 신문기사 등을 통해 나치를 소개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2차세계대전 당시 베를린 경찰서장을 지냈던 헬도르프(graf von helldorf)와 SS 총사령관 하인리히 힘러(Heinrich Luitpold Himmler), 게슈타포 창설자 헤르만 괴링(Hermann Göring), 유대인 대량학살 책임자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 나치 선전장관 파울 괴벨스(Paul Goebbels) 등 나치 정권 부역자들에 대한 유년시절, 나치 정권 때 행적과 전후 재판 과정을 상세히 조명하고 있다.



공포의 지형 기념관 인근에 있는 안홀트역 잔해. 1942년부터 1945년까지 게슈타포에게 조사를 받은 유대인 5만명이 이곳을 통해 강제수용소로 끌려갔다.

맺음말

독일인들은 공간을 통해 과거의 치부를 과감히 드러내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독일인부터 아시아인까지 ‘공포의 지형’ 기념관을 찾아 과거와 소통하고 있었다. 낙서로 도배된 베를린 장벽, 그 밑으로 보이는 계슈타포 건물 잔해, 주변에 배치된 나치 부역자들의 행적 전시는 책 한권을 읽은 것보다 뇌리에 깊이 박혔다.

기념관 인근에 있는 안홀트역 잔해 또한 마찬가지였다. 독일은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정문 벽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고 어떠한 곳인지를 알리는 표지판만 서 있을 뿐이다. 하지만 곳곳이 훼손되며 곧 무너질 것 같은 모습은 과거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느꼈을 공포를 자연스레 전달하고 있었다.

공간이 가진 힘은 현장감과 공감이다. 가해 장소에서는 가해자들의 행적을 조명하고, 피해 장소에서는 학살과 탄압의 역사를 전달해야 효과적이다.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본부였던 옛 505보안부대터 또한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찾아야 한다.

505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끔찍했던 기억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 시민군의 활동했던 김모(69)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월 항쟁 이후 도망다니다 군산에서 붙잡혔다”며 “수사관들이 얼굴에 검은천을 씌우고 건물 지하로 끌고 내려가는데 매우 공포스러웠다”고 밝혔다.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고 자신도 총기 개머리판으로 무릎을 맞아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이 주관한 ‘505보안부대 1차 집담회’에서도 시민군 출신들은 505보안부대에 대해 “킴킴하고 좁은 계단을 지나 지하 조사실에 들어가니 문 맞은편에 몽둥이가 세워져 있었다. 너무 무서웠다”고 기억했다.



일본 히로시마시 평화기념공원 내에 있는 원폭돔. 이 원폭돔은 1945년 8월6일 미국이 히로시마 상공에서 투하해 폭발한 원자폭탄의 충격을 견뎌낸 건물로 핵폭탄 피해를 경고하는 대표적인 상징물로 꼽히고 있다.

505보안부대 옛터를 가공한다면 그곳에서 자행됐던 끔찍했던 일들은 희미하게 희석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독일이 그랬듯 광주시도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후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